



의안번호

제107호

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22. 8. 19.

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07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8. 19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 경쟁제한 규제 개정 권고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, 소비자권익제한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정과제인 「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」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“불필요한 과당 경쟁 자제 문구” 삭제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참고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7. 21 ~ 2022. 8. 10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건설정책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)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건 설 과 장	홍 재 창
	건 설 정 책 팀 장	유 지 영
	담 당 자	이 은 미 (7 4 6 - 6 1 7 5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맡은일)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,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)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해당없음

2. 비용추계결과**가. 추계의 전제**

○ 해당없음

나. 추계결과

○ 해당없음

4. 작성자

건설과장 홍재창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,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20조(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)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·거래조건의 결정,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,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,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·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121조(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)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 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.